

## 청년 비정규직노동자 김용균, 빛으로 묻히다

글·사진 / 임성용

### 김용균이라는 빛

2월 9일, 쌀늘한 겨울 해가 넘어가는 늦은 오후였다. 5시 반이 지나면서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 앞이 분주해졌다. 대형 버스들이 공원 입구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노동조합 차량들도 점차 늘어났다. 버스 전면에는 ‘謹弔’ 알림이 붙어 있고 ‘청년 비정규직 故 김용균 노동자 민주사회장’이라는 문구가 보였다. 김용균이 죽은 지 62일이 지나고 나서 비로소 장례식이 열린 것이다.

버스에서 많은 사람이 내렸다. 민주노총 조합원들, 비정규직노동자들, 세월호 유가족들, 일반 시민들이었다. 이들은 이날 이른 새벽부터 충남 태안과 서울대 병원에서 발인제를 하고 노제를 지내고 서울



2019년 2월 9일, 죽은 지 62일 만에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노동자 민주사회장'이 열렸다.

광화문광장에서 영결식을 마쳤다. 그리고 마지막 안장을 위해 모란공원으로 함께 온 사람들이었다.

수십 개의 만장이 줄을 이었다. 김용균의 얼굴이 그려진 커다란 현수막이 앞장서고, 영정을 고등학생쯤으로 보이는 옛된 친구가 들었다. 김용균의 큰이모의 아들이라고 했다. 영정 뒤에는 붉은 바탕에 흰색 글씨로 “김용균이라는 빛”이라고 쓴 대형 명정이 뒤따랐다.

큰 ‘빛’을 진 사람들에게 김용균은 하나의 ‘빛’으로 돌아왔다. 김용균의 죽음 이후에서 장례식까지, 한 사람의 청년 노동자가 죽어 비정규직 투쟁의 빛으로 되살아났다. 일명 “김용균법”이라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8년 만에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정부와 민주당에서도 당정대책회의를 통해 공공과 민간 기업들의 경영 방식 변화가 필요한 “위험의 외주화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일부 위험한 업

중에서 도급을 제한하고 안전 조치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제2의 김용균을 막을 수 있을까?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과제가 남아 있다. 그러므로 김용균은 빛이면서 빛이고, 빛이면서 빛이 되었다.

## 김용균은 누구인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산하 한국서부발전 하청 업체인 한국발전기술에서 일하다 숨진 김용균은 군대를 갓 제대하고 사회에 첫발을 디딘 스물네 살의 청년이었다.

1994년 12월 6일 경상북도 구미 출생

2018년 9월 17일 한국발전기술 입사, 서부발전 태안화력본부 트랜스퍼타워 배치.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23분 컨베이어 벨트 구간에서 발견.

참으로 짧은 삶이었다. 한 인간의 생이 기계에 휘말려 비참한 죽음으로 끝났다. 한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어둠과 분진 속에서 석탄가루를 뒤집어쓴 그의 몸은 일순간에 갈기갈기 찢겨졌다. 입사 3개월 만에 머리와 몸통이 분리된 그의 몸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참담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의 몸이 곧 비정규직이라는 이름표를 단 노동자들의 몸을 대변했다. 그의 몸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었다. 슬픔과 추모만으로 대치할 수 없는 분노였다. 그래서 그의 몸은 냉동고에 두 달이 넘게 얼어 있었으나 그의 심장은 식지 않았다.



2월 15일. 광화문 세월호광장에 있는 故 김용균 시민분향소에서는 김용균 사망사건 규탄 시민단체(한국작가회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작가들은 김용균의 죽음을 이렇게 규정했다.

김용균은 왜 죽었습니까?

일하다 잘못해서 죽은 겁니까? 작업 중에 실수로 죽은 겁니까?

고장 난 손전등이 하청 노동자 김용균이 왜 죽어야만 했는지를 증명합니다.

핸드폰 후레쉬를 비추면서 혼자 일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깔려들었습니다.

그곳은 이미 열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은 죽음의 작업장이었습니다.

(중략)

김용균의 죽음은 공기업 민영화, 죽음의 외주화가 부른 타살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 노암 촘스키는 말했습니다.

“부패한 정부는 공기업을 민영화시킨다.”

- 한국작가회의 성명서, 「비정규직 철폐하고 죽음의 외주화를 당장 멈춰라」

## 비정규직 양산의 주범 공기업의 민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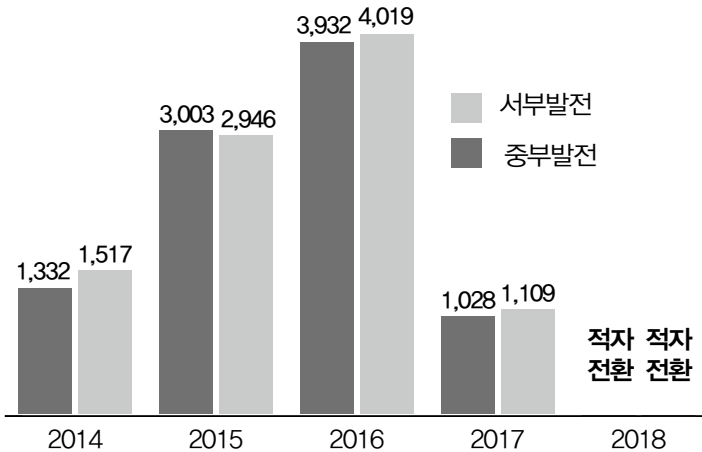
김용균이 다니던 한국발전기술은 발전 설비를 운영하고 보수하는 업체다. 원청회사는 2001년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서 분할되어 설립된 한국서부발전(주)다. 서부발전은 태안발전본부, 평택발전본부, 서인천발전본부, 군산발전처 등에서 전기를 생산하여 한전에 판매하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 태안발전본부다. 한전에는 서부발전과 중부발전을 비롯해서 동서, 남부, 남동발전 등 자회사가 다섯 개가 있다. 한마디로 공기업을 분리해서 사기업화시킨 셈이다.

이들 발전 5사들은 지난 2016년에는 4,000억 원 안팎, 2017년 1,000억 원 안팎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서부발전의 경우 2015년 매출액이 533억, 2016년 692억, 2017년에는 765억이었다. 2017년도 당기순이익이 91억원이었다. 당기순이익 12%는 코스닥 상장사 평균의 6배이고 코스피 상장사 평균의 2배에 이른다.

그런데 김용균이 죽고 발전 하청 업체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 요구가 노동계 비정규직 투쟁의 쟁점으로 떠오르자, 화력발전소를 운

영하는 중부·서부발전이 지난해 10년 만에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는 기사가 나왔다. 탈원전·탈석탄 기조에 한전의 적자가 커서 다섯  
개의 발전 자회사의 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산 계수를 조정했기 때  
문이라고 한다. 한전이 갑자기 적자 폭을 줄이려고 발전 자회사들의  
이익을 빼앗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김용균의 죽음으로 대두된 하청 업  
체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대응책인지 의문이 든다.

중부·서부발전의 당기 순이익 현황(단위: 억원)



2018년은 예상치,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출처: 「한전 적자에 유탄 맞은 중부·서부발전」, 『서울경제』 2019년 2월 14일

이 기사에서는 중부·서부발전이 10년 만에 당기순손실을 기록  
했고 재생에너지 설비투자 감소가 우려된다고 했다. 정말 그럴까? 한  
전의 적자가 탈원전 탓이고 탈석탄과 신재생에너지 등의 영향 때문일  
까? 한전의 전기 요금 체계부터 문제가 있다는 건 익히 알려져 있다.

모든 가정에서 쓰는 전력량을 합한 것이 현대제철이나 포스코, 삼성전자 등 상위 다소비 기업체에서 쓰는 사용량보다 적다. 기업체에서 훨씬 더 많은 전기를 소비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전에는 기업에 너무 값싼 전기를 공급해 주고, 전기 요금 현실화를 내세우면서 가정에는 누진제를 적용했다. 기업체도 전기 요금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가정에는 못 미친다. 많이 쓰는 곳에서 많이 내야 하는데, 한전 스스로가 적자를 이미 키워 왔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일본이나 프랑스에 비하면 아주 적은 편이다. 철강, 자동차, 전자 등 산업 분야에서 워낙 많은 전기를 쓰고 있고 전체 전력 소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가정용 전기는 20%도 안 된다. 기업에서는 산업용 전기 요금이 가스나 석유 가격보다 싸니까 지난 10년간 전기 사용이 60% 이상 폭증했다. 이처럼 전기 소비 구조는 친재벌, 친기업적인 정부의 책임 때문이 분명하고 왜곡된 전기 요금 정책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공기업 경영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끊임없이 ‘민영화 정책’을 추진했다. 한전 역시 자회사를 설립하고 지분을 매각하고 하청 노동자들을 양산해 왔다. 불법 파견으로 대표되는 대기업 비정규직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공기업이 바로 비정규직 양산의 주범이었다는 사실이다. 비정규직노동자 김용균의 사망은 공기업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 사건이었다.

## 대통령상을 수상한 무재해 사업장

그렇다면 김용균을 죽게 한 한국서부발전은 어떤 회사인가?

서부발전은 정규직 임직원이 2,463명이라고 한다. 평균임금은 공

기업 2위로 9,150만원이다. 1위는 한전의 또 다른 자회사인 한국전력 기술로 9,228만원이라고 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서부발전은 2015년, 대한민국 안전 대상 대통령상을 받았다. 2017년에는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가 ‘무재해 사업장’으로 인증되었다. 그래서 산재보험료를 20억 원 넘게 감면받기도 했다. 매년 김용균과 같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지만, 하청 노동자들은 서부발전 소속이 아니므로 산재 집계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외주업체 노동자들은 죽든가 말든가 그곳은 ‘무재해 사업장’ 인증 업체였다. 무재해 인증 업체로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서부발전은 김용균의 죽음에 대해서 사실상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없다.

서부발전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9년 동안 44건의 산재가 발생해 6명이 사망했다”라는 자료를 냈다. 하지만 이 자료에는 2011년 9월 28일의 발전 시설 외벽 공사와 2016년 2월 18일의 컨베이어 벨트 고정 공사 도중 각각 세 명과 두 명이 추락사한 사실은 누락됐다. 서부발전은 이 밖에도 산재 사고 발생 시에 구급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그러나 무재해 인증 사업체라니!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이 공기업 자회사 사업장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다.

서부발전은 원청에서 하청, 하청에서 하청 재도급으로 이어지는 ‘외주 노동’의 전형이었다. 이 같은 형태는 어떻게 보면 ‘불법파견’이 나 다름없다. 김용균은 하청 회사인 한국발전기술과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그 자체가 원청회사의 지시와 통제를 받는 ‘노예 계약’이었다.



따라서 김용균의 죽음을 계기로 공기업인 발전소 업무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전원 정규직화해 달라는 요구가 터져 나왔다. 그러나 이 요구는 서부발전이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

## 52일 만에 이루어진 합의

노무현 참여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공기업 민영화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까지 15년 동안 이어졌다. 그들은 한결같이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공공기관의 혁신”(노무현), “공공기관의 선진화”(이명박), “공공기관의 합리화”(박근혜), 모두가 공공기관의 성과를 높이겠다는 것이었는데, 그 결과는 민영화된 업체들의 배만 불러주는 게 전부였다. 어떻게 해서 그들이 이익을 챙겼는지는 뻔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피땀을 빨고 하청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잇속을 챙겼다. 4대강 사업으로 금수강산을 망친 수자원공사, 해외 자원 개발로 국고 수조 원을 날린 석유공사, 가스공사처럼 공기업은 모든 정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동원하고 이용한 것에 불과했다.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라고 해서 크게 다를 게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공약에서 이렇게 밝혔다. “상시적으로 일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민간 기업에도 비정규직을 줄이고 차별 해소를 위해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을 법제화하고 강력히 추진하겠다.” 일하는 사람을 차별하는 나쁜 일자리가 아니라 미래를 꿈꾸면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던 문재인은 대통령에 취임하자 인천공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직접 약속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 꿈같은 약속은 공염불이었다는 말인가? 김용균법이 개정된 것 말고는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 전환은 전무했다. 김용균 사망 52일 만에 이루어진 대책위와 당정/원하청 ‘합의’는 김용균법의 후속 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원청과 하청으로 나뉘는 ‘외주화의 구조’는 바로잡지 못했다.

### 합의문

1. 석탄발전소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운영하여 사고가 발생한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여 재발 방지 및 구조적-근본적 개선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
2. 석탄발전소 작업 현장에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인 1조 시행 등 긴급 안전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적정 인원을 충원하도록 하는 한편, 향후 공공기관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 사고는 원하청을 불문하고 해당 기관장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
3. 금번 사고가 발생한 연료·환경 설비 운전 분야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으로의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매듭짓는다. 전환 방식, 임금 산정, 근로조건 등 구체적 사항은 발전 5사의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통해 논의기로 한다.
4. 경상 정비 분야는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구성하여 ‘위험의 외주화 방지’라는 원칙하에 세부 업무 영역을 분석하여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 근로자의 처우 및 정규직화 여부 등 고용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5. 당·정은 이상의 방안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가칭)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 TF’을 구성, 운영, 지원한다.

시민대책위 대표 단식단에서는 비록 직접고용은 안 됐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이 섰다고 보고 단식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합의안의 주된 내용인 ‘연료, 환경 설비 운전 직종의 5개 발전소를 통합한 공공기관 설립, 정규직화, 경상 정비 직종의 협의체 논의 시작, 진상규명 위원회 구성’을 받아들이고 장례를 치르기로 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만납시다”라고 적힌 피켓 사진 한 장을 남기고 간 김용균이 죽고 두 달이 넘도록 농성하고, 단식하고, 나날이 밤을 새워 투쟁한 결과였다. 시민대책위에서는 발전소 비정규직노동자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이루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발전소를 넘어 공공부문 전체, 한국 사회의 죽음의 외주화를 끝내기 위한 투쟁을 지속하겠다는 목표와 함께 발전 부문을 포함한 공공서비스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는 방향을 정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 비정규직 없는 세상에서 영면하소서

고 김용균의 안장식은 오후 5시 40분에 시작되었다. 계속 흑한이었는데 다행히도 장례일은 추위가 많이 누그러졌다. 흰 향아리에 담긴 김용균의 유골이 장지에 안치되고 석판 뚜껑이 덮였다. 아버님과 어머니, 가족들, 그리고 장례위원들, 직장 동료들의 집토……. “노동은 사랑이야, 하나 되는 아픔이야.” 낮은 음악이 흘렀다.

김용균과 함께 일했던 어느 동료가 혼잣말하듯 조용히 말했다.

“우리 시간이 너무 짧았어. 미안해.”

다른 한 동료가 그의 손을 잡았다.



“외롭게 안 갔어요. 이젠 울지 마세요. 많이 울었잖아요.”

“많은 짐을 남겨 놓고 갔지만, 외롭지 않게 우리가 있잖아요.”

집토가 끝나고 평토제로 안장이 마무리되었다. 한국발전기술 노조 지부장은 편지를 읽었다. “김용균이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힘과 마음을 주지 못했다. 우리가 더 빨리 해결했으면……. 더 이상 이런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이제 우리가 하겠다.” 무엇보다 한국발전기술에서 전혀 응하지 않았던 노조 단협이 “어제 체결되었다”라며 김용균 앞에 머리를 숙였다. 조합원들이 나와서 노조 깃발을 문었다. 노조 깃발 위에 하얀 자갈이 깔렸다.

김용균의 죽음에서 ‘어머니’를 빼놓을 수 없다. 어머니가 나서서 흔들림 없이 싸웠고, 합의를 하고 장례에 이르기까지 어머니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광화문 농성장에서 쓴 어머니의 편지는 자식을 둔 모든 어머니는 물론 온 국민들의 마음을 울렸다. 어머니는 여전히 담대하고 차분하게, 도움을 준 이들에게 거듭 고마움을 전했다. 하지



만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은 오히려 여기까지 오게 해 준 어머니  
께 고맙다고 했다. 어머니의 한마디가 유난히 힘 있게 들렸다.

“저는 노조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노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시대

---

임성용

화물 운수 노동자, 시인, 시집으로 『하늘공장』 등이 있고, 산문집으로 『뜨거운 휴식』이 있다.